2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제1절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32**

제2절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41**

제3절 한 · 미 전략동맹의 심화 · 발전 **52**

제4절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 심화 **68**



DIPLOMATIC WHITE PAPER

제 1 절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1 남북 관계

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부는 출범 이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확고하게 억지하는 한편,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기존 합의의 이행과 점진적인 협력의 축적을 통해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다.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조하에 북한과 원칙 있는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인도적 지원 및 사회 문화 교류 등 실질적 진전을 이룩함

으로써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하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 온바, 주요 양자 및 다자 무대에서 미 · 중 · 러 등 주변 핵심국을 포함,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로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였다.

2)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협력 사업 지원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큰 틀에서, 북한의 영유아 ·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남북 간 정치 상황과는 별개로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북한 내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1990년대 중반부터 매년 참여해 오고 있으며, 2013년에는 유엔아동기금의 영유아 예방접종 및 치료식 지원 사업에 604만 불, 세계보건기구의 병원 개보수, 의료기기 지원, 필수의약품 공급, 의료인력 교육 등 사업에 630만 불을 지원하여 총 1,234만 불을 지원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를 통해 지원한 상기 금액은 '13년도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지원 총액(유엔 인도지원조정사무소(OCHA) 등록 기준) 6,306만 불 중 19.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지원 규모면에서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CERF)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인도주의의 관점에서 대북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3) 인도적 협력

정부는 보편적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는바, 남북 간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다양한 민간단체들의 북한 내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과 순수한 사회문화교류를 일관되게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13년 한 해 동안 24개 단체, 67.5억 원 상당의 민간차원 대북지원을 승인하였다.

정부는 시급한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오고 있다. 2010년 11월을 마지막으로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중단되었던 이산가족 상봉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남 · 북은 2013년 8월 23일 이산가족 상봉 추진 관련 적십자 실무 접촉을 통해 9월 25일부터 30일 사이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9월 16일에는 남북 간에 상봉 대상자 최종 명단까지 교환하였으나, 행사 나흘 전인 9월 21일 북측의 일방적인 연기 통보로 인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정부는 정치적 이유에 따른 이산가족 상봉의 일방적 연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북측에 상봉 행사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인도적 차원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첫 단추'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4) 북한 인권 문제

정부는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인식하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갖고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유엔인권이사회 · 총회 북한 인권결의에 찬성투표 및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유엔 차원에서의 북한 인권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양자 차원에서도 미국 · EU 등 주요국들과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방안을 협의해오고 있다.

최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제고되는 가운데, 2013년 3월에는 유엔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를 통해 유엔 차원의 사실조사 메커니즘인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가 설립되었다. 동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이러한 침해의 책임규명(accountability)을 임무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일본, 미국, 영국 등을 방문, 탈북민들을 증인으로 한 공청회 개최와 증인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조사 활동을 진행하였다. 우리 정부도 조사위원회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동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동 조사위원회의 활동은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5)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관련 국제공조

북한은 그간 연평도 포격도발 및 천안함 피격사건에도 지속되어 온 개성공단 운

용을 2013년 4월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남북 간 모든 경협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남북 경협의 마중물인 동 사업을 일방적으로 운용 중단시킨 북한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 측의 운용 재개를 촉구하였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위기를 새로운 변화와 기회의 계기로 활용,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큰 틀에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북한 측의 일방적인 조업중단 재발방지, 우리 출입인원의 신변 안전 등을 포함한 발전적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북한과 7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첫 성과로서 남 · 북은 8월 14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미 · 중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유엔사무총장 등은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현재 남북 공동 위원회 및 관련 분과위를 통해 신변안전 · 자산보호 · 3통(통행 · 통신 · 통관)문제 등에 있어 실질적 진전을 추구해 나가고 있으며, 동시에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제도 개선과 향후 투자설명회 개최 추진 등을 포함한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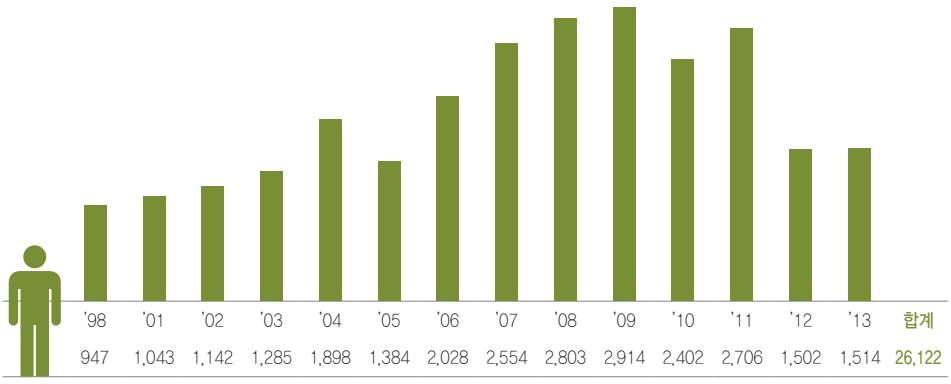
6) 북한이탈주민 문제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들을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하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하여 체류국 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제23차 유엔인권위

원회(2013.6.5) 계기 국제사회의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준수를 촉구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G8 정상회의 공동선언(2013.6.18 채택)에 환영 입장을 표명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다자 차원의 외교활동을 벌여왔다.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수는 2013년 기준 총 26,122명이 되었다. 2013년도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수는 1,514명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도별 국내입국 현황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해외에서 국내 이송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반 후생 · 복지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사전 적응교육 차원에서 각종 교양 · 학습 도서 등을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조

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금 지원, 주거 알선, 사회적응 교육, 직업교육 등의 형태로 제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 국제 공조를 통한 정세 관리

북한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 강행(2.12) 이후, 3-4월에 걸쳐 ▲정전협정 백지화(3.5) ▲남북 불가침합의 전면 폐기선언(3.8) ▲평양 주재 외교단 철수 권고(4.5)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 철수 조치(4.8) ▲주한 외국인 대상 철수위협(4.9) 등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수사적 위협과 도발을 지속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북한의 위협과 도발 행위에 대해 정부는 강력한 억지를 토대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하에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 접촉과 주한 외교단 대상 브리핑 등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동요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하였다.

또한, 주요국 정부와의 다양한 양자 · 다자회의 계기에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원칙을 설명하여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와 공감을 확보하였으며, 북한이 도발과 위협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3 한반도 평화 정착 및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

정부는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5월 8일 미국 의회연설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구상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냉전과 분단의 상징인 DMZ를 평화와 화합의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동 구상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조와 지지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유엔 및 미국,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DMZ 세계평화공원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 결과, 동 구상이 한반도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관련국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였다.

또한, 정부는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차원의 중장기적 평화구조 창출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관련국과 협의 진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주요국 학계와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관련 논의가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따라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함께 한반도 통일에 대한 폭넓은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주요국 정부와 통일 관련 협의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통일의 필요성과 혜택, 우리 주도 통일의 당위성 등을 지속 설명하여 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 및 통일기반 구

축을 위하여 국제사회와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제 2 절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1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우리의 대응

2012년 12월 12일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였으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하여 2013년 1월 23일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를 채택하여 대북 제재를 강화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1월 24일 국방위 성명을 통해 안보리 결의를 비난하면서 핵실험을 실시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이후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 위협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월 12일 함경북도 풍계리 지역에서 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계획을 파악한 직후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장관회의 등 정부 내 협의체를 가동하여 북한 핵실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북한에 대해 핵실험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아울러,

미 · 중 · 일 · 러 등 주요국 외교장관과의 협의 및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우리 정부는 2월 12일 핵실험 직후 대통령 주재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정부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는 동 성명에서 북한의 도발행위로 야기되는 모든 결과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포함하여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강화해 나갔다. 특히 우리는 2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안보리에서의 북한 핵실험 관련 대응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였다. 핵실험 당일인 2월 12일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북한의 핵실험을 안보리 결의의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북 제재에 관한 논의를 주도해 나갔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3월 8일 기존 제재의 범위와 강도를 한층 강화한 결의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아울러, 우리는 관련국과의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 여론을 주도하였으며, 그 결과 85개국, 7개 국제기구의 대북 성명 발표를 이끌어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 주요 내용

- 제재 대상 추가 지정 (개인 3명, 단체 2개) ※ 총 누계 개인 12명, 단체 19개로 확대
- 핵 · 미사일 · 화학무기 관련 금수품목 8개 추가 (핵 2개, 미사일 5개, 화학무기 1개)
  – 핵 분야에서는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운영에 필수적인 품목 2개 포함
- 회원국 영토 내 북한 향 · 발 금수품목 적재 의심 화물(중개 · 알선 화물 포함) 검색 의무화
-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이 검색에 불응 시 회원국 항구 입항 불허 촉구
- 금수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의 이착륙 및 영공 통과 불허 촉구
- WMD 및 안보리 결의 위반 활동 관련 금융 서비스 제공(현금 이전 등) 금지 의무화
- 결의에 반하는 북한 은행의 회원국 내 신규 활동 및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신규 활동 금지 촉구
- 금지 활동 · 결의 위반 · 제재 회피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적 금융지원 금지 의무화 및 어떠한 북한 향 · 발 품목에 대해서도 공급, 판매, 이전 방지 촉구(전면적 감시 "catch-all" 조항)
- 보석, 고급 자동차, 경주용 자동차, 요트 등 금수 대상 사치품 명시
- 북한 외교관의 결의 위반 활동에 대한 주의 강화 촉구
- 제재 회피와 결의 위반을 지원한 개인 및 단체를 제재위가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
  – 안보리 제재 대상 개인 · 단체 뿐 아니라 이들의 대리인과 수하인에게도 적용
-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s)" 의지 천명

그러나 북한은 3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과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3월 9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와 위성발사국 지위를 영구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핵 선제타격을 언급하고, 군사적 충돌이 있는 경우 전면전, 핵전쟁으로 비화할 것이라고 하면서 위협의 수위를 계속 높여 나갔다. 아울러 북한은 2012년 4월 개정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한데 이어, 2013년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당 노선으로 채택하고,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하여 핵보유 의지를 더욱 노골화하였다. 또한 4월 2일 북한 원자력 총국은 5MWe 흑연 감속로 등 영변의 모든 핵시설을 재가동한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해 나갔다. 미국, 일본, EU 등 우방국들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독자적 제재 조치를 강화하였다.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갔다. 중국은 세관 검열 등을 강화하고, 9월 23일에는 900여 개 품목에 달하는 WMD 관련 이중 용도 대북 금수품목 · 목록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중국은행은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12월 3일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의 국내이행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을 시행하였다. 북한의 반복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메커니즘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 무기를 적재한 청천강호의 파나마 운하 통행을 차단하고, 북한의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마식령 스키 리프트 구매 시도를 무산시키기도 하였다.

2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핵보유 의지를 더욱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우리 입장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우리 정부는 핵심 관련국과의 정상 및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북핵 불용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갔다. 한 · 미 양국은 5월 7일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한 · 미 정상회담 결과 채택된 「한 · 미 동맹 60주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와 도발을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경우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전략적 메시지를 한 목소리로 강조하였다. 6월 28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한 · 중 정상회담 결과 채택된 「한 · 중 미래비전 공동선언」에서는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고 천명하였으며, 이어 10월 7일 APEC 계기 한 · 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핵보유와 핵실험에 대한 결연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11월 13일 한 · 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독자적 핵 · 미사일 구축 능력에 대한 불용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 입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우리는 여타 주요국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공고한 지지를 확보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9.9), 인도네시아(10.12), 프랑스(11.4), 영국(11.6), EU(11.8) 등과의 양자 정상회담 결과, 북핵 불용과 북한의 안보리 결의 이행 등 국제의무 준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이와 함께 외교장관회담 등 여타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도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고히 하였다.

한편, G8 외교장관회의(4.12) 및 정상회의(6.18) 공동성명, 한-ASEAN/ASEAN+3/EAS 외교장관회의(6.30-7.2) 및 정상회의(10.9-10) 의장성명에서도 북한 비핵화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단합된 메시지가 도출되었다. 특히 북한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의장성명(7.2)에서는 기존의 양비론적 표현을 삭제하고 북핵 불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표명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전통적으로 북한

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도 고립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유도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10월 17일 IAEA 총회에서도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6자회담 재개의 긍정적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채택되었다. 특히 동 결의는 미얀마가 처음 동참한 것을 비롯하여 55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갔다는데 의의가 있다.

북핵문제 관련 주요 양자 · 다자회의 채택 문서

일 시	주요 내용
2013. 4. 11	G8 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
2013. 4. 12	한 · 미 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
2013. 4. 25	ASEAN 정상회의 의장성명
2013. 5. 7	한 · 미 동맹 60주년 공동성명
2013. 6. 18	G8 정상회담 공동성명
2013. 6. 28	한 · 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2013. 6. 30	ASEAN+3 외교장관회담 의장성명
2013. 7. 1	한 · ASEAN 외교장관회담 의장성명
2013. 7. 2	ARF 외교장관회담 의장성명
2013. 7. 2	EAS 외교장관회담 의장성명
2013. 9. 9	한 · 베트남 공동성명
2013. 9. 20	IAEA 총회 북핵 결의
2013. 10. 9	한 · ASEAN 정상회담 공동성명
2013. 10. 10	EAS 정상회담 공동성명

2013. 10. 10	ASEAN+3 정상회담 공동성명
2013. 10. 12	한 · 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공동성명
2013. 10. 17	UN 총회 1위 북핵관련 결의《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하여》
2013. 10. 18	UN 총회 1위 북핵관련 결의《CTBT》
2013. 10. 18	UN 총회 1위 북핵관련 결의《핵무기 전면철폐를 향한 단합된 행동》
2013. 10. 22	한 · 폴란드 정상회담 공동선언
2013. 10. 22	한 · 덴마크 총리회담 공동언론발표문
2013. 11. 4	한 · 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2013. 11. 6	한 · 영국 정상회담 공동성명
2013. 11. 8	한 · EU 정상회담 공동선언 및 공동언론발표문
2013. 11. 12	ASEM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2013. 11. 13	한 · 러시아 정상회담 공동성명

한편, 국내뿐 아니라 해외 전문가 및 언론 인터뷰, 브리핑, 학계 세미나를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과 정책을 홍보하고 우리 입장에 대한 지지 확보 노력을 계속하였다.

3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 여건 조성 노력

북한은 5월 22일 최룡해 특사의 중국 방문 이후 비핵화 조치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주장을 지속하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을 위반하면서 3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며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북한 스스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구체적

인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우리 정부는 6자회담이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화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아울러 대화 기간 중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의미있는 대화재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 원칙에 대한 관련국 간 확고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미 · 중 등 핵심 관련국들과 정상 및 외교장관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7월 ARF 계기와 9월 유엔총회 기간 중 한 · 미, 한 · 중, 미 · 중 외교장관 간 비핵화 진전 방안에 대한 연쇄 협의를 갖고,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의 틀을 마련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 미 · 중을 중심으로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후속 협의를 통해 북한 비핵화 대화재개 조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갔다.

한편, 우리 정부는 6자회담 참가국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의 소다자 협의도 추진하였다. 7월 22일 서울에서 한 · 미 · 중 3국 간 정부 및 학계 인사가 공동 참석한 가운데 한 · 미 · 중 1.5트랙 회의를 개최,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관련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진행하여 3국 간 전략적 소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한 · 미 · 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3국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갔다.

북핵문제 관련국 간 주요 고위급 협의

일 시	주요 내용
2013. 2. 27	한 · 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3. 2. 28	한 · 중 6자회담 차석대표 협의
2013. 3. 18	한 · 미 6자회담 차석대표 협의
2013. 4. 1	한 · 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3. 4. 2	한 · 미 외교장관 회담
2013. 4. 11	한 · 중 6자회담 차석대표 협의
2013. 4. 24	한 · 중 외교장관 회담
2013. 4. 30	한 · 일 6자회담 차석대표 협의
2013. 5. 2	한 · 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3. 5. 6	한 · 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3. 5. 7	한 · 미 정상회담
2013. 5. 14	한 · 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3. 6. 18	한 · 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3. 6. 19	한 · 미 · 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3. 6. 21	한 · 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3. 6. 22	한 · 중 6자회담 차석대표 협의
2013. 6. 27	한 · 중 정상회담
2013. 6. 30	한 · 중 외교장관 회담
2013. 7. 1	한 · 미 · 일 외교장관회담
2013. 7. 1	한 · 일 외교장관 회담
2013. 7. 1	한 · 러 외교장관 회담
2013. 7. 18	한 · 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3. 7. 19	한 · 러 6자회담 차석대표 협의
2013. 7. 22	한 · 미 · 중 1.5트랙 회의

2013. 8. 14	한 · 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3. 8. 22	한 · 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3. 9. 10	한 · 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3. 9. 27	한 · 미 외교장관 회담
2013. 9. 27	한 · 일 외교장관 회담
2013. 9. 27	한 · 중 외교장관 회담
2013. 10. 10	한 · 중 정상회동
2013. 11. 4	한 · 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3. 11. 6	한 · 미 · 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3. 11. 13	한 · 러 정상회담
2013. 11. 13	한 · 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3. 11. 14	한 · 중 6자회담 차석대표 협의
2013. 11. 22	한 · 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4 2013년 북핵 외교 평가 및 향후 과제

북한은 2013년 초 3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비핵화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핵무력 · 경제발전 병진노선을 고수하면서 전제 조건 없는 6자회담의 재개만을 주장하며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이전보다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을 주도하는 등 대북 제재를 강화하여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 관련국과의 협력을 통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원칙 있는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노력을 기울여 나갔다. 아울러 6자회담 참가국과의 양자 · 소다자 협의를 통해 북핵문제 해

결을 위한 동력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도 계속해 나갔다. 또한 다양한 외교무대를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정부는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기반으로 하여, 한편으로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대화재개 노력을 통해 원칙 있고 실효적인 투트랙 전략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양자 · 다자 대북 제재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여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원칙 있는 비핵화 대화 재개를 통해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제 3 절

한 · 미 전략동맹의 심화 · 발전

1 한 · 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한 차원 높은 발전

2013년은 박근혜정부와 오바마 2기 행정부가 함께 출범하는 해이자, 한 · 미 동맹이 60주년을 맞는 해로서, 정부는 그동안 동맹이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 · 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켰다. 한 · 미 양국은 물샐 틈 없는 대북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실험 감행(2.12) 및 각종 도발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환경, 비확산, 사이버안보, 개발, 인권은 물론, 시리아 문제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도전들에 공동 대처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에 함께 기여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해외방문 일정으로 5월 5-9일간 미국을 방문, 5



한 · 미 정상회담(2013.5.7, 워싱턴 D.C.)

월 7일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 간 신뢰 및 유대를 구축하는 한편, 향후 4년간 양국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박 대통령은 ▲북핵 · 북한 문제 관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토대로 한 · 미 간 공조를 견고히 하였으며 ▲전작권 전환, 한 · 미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 등 주요 현안의 호혜적 해결을 위한 정치적 추동력을 마련하였다. 동 방미 계기 채택된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은 한 · 미 동맹 발전의 청사진을 담은 문건으로서,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을 잘 제시해 주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의 취임 첫 해 방미로는 이례적으로 의회 상 · 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초청을 받아, ▲한반도 평화 및 통일 기반 구축 ▲동북아 평화 · 협력 증진 ▲지구촌 평화 · 번영 기여라는 한 · 미 동맹이 나아갈 비전과 목표를 제시, 미국 조야의 공감을 확보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2013.5.8, 워싱턴 D.C.)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참석 계기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대리하여 참석한 존 케리(John Kerry) 미 국무장관을 10월 10일 접견하고, 북핵 · 북한 문제 관련 한 · 미 간 긴밀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

편, 중국과의 협력을 제고할 필요성에도 공감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조셉 바이든(Joseph Biden) 부통령이 미국 부통령으로서는 10년 만에 12월 5-7일간 서울을 방문하였다. 바이든 부통령의 박 대통령 예방 및 정홍원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 한 · 미 양국은 ▲한 · 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 및 발전 ▲북핵 · 북한 문제 ▲동아시아 정세 ▲글로벌 이슈 분야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 · 미 양국은 2013년에 정상급 외교 뿐 아니라, 외교장관 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외교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3년 1년간 존 케리(John Kerry) 미 국무장관과 총 3차례 회담을 갖고, 양국 외교 수장 간 개인적인 유대 강화는 물론, 양국 간 실질협력을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였다. 4월 2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첫 번째 한 · 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양 장관은 양국 정부의 대외정책을 상호 조율하고,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한 · 미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재확인하면서 북핵 · 북한 문제에 있어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대내외에 과시하였다. 곧이어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불과 10여일 만인 4월 12일 방한, 두 번째 한 · 미 외



외교장관 회담(2013.4.2, 워싱턴 D.C.)



유엔총회 계기 외교장관 회담(2013.9.27, 뉴욕)

교장관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양국 정부 출범 초기부터 양국 외교당국 간 강력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북한 · 북핵문제, 동북아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 있어서의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의 기회를 가졌다. 이처럼, 5월 정상방미에 앞서 이루어진 양국 외교장관의 상호 교환방문은 한 · 미 간 첫 정상외교가 내실 있는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양국 외교장관은 9월 27일 제68차 유엔총회 참석계기 뉴욕에서, 세 번째 회담을 갖고, 한 · 미 동맹이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속 발전시켜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 · 미 간 실질 협력 증진방안 뿐 아니라 ▲북한 · 북핵문제 ▲한 · 일 관계 ▲미 · 중 관계 ▲시리아 문제 등 지역 및 범세계 이슈 관련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였다.



외교장관 회담(2013.4.12, 서울)

아울러, 윤병세 외교장관은 7월 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 계기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과 한 · 미 · 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향한 3국간 공조를 재확인하고 ▲역내 다자 협의체 발


한 · 미 · 일 외교장관 회담
(2013.7.1, 반다르세리베가완)

전 ▲시리아 및 중동평화 문제 등 지역 · 범세계적 현안 해결을 위한 3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밖에도 한 · 미 양국 정부는 주요 정책 현안 및 관심사에 관한 외교 · 안보 당국 간 협의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였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10월 23-26일간 방미, 라이스(Susan Rice) 미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면담(10.24)을 갖고, 양국 간 NSC 차원에서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은 번즈(William Burns) 국무부 부장관과 한 · 미(5.7), 한 · 중(6.27), 미 · 중(6.7-8)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동북아 정세 관련 긴밀한 공조의 기회를 가졌으며(4.27 서울 및 6.10 워싱턴), 12월 17일에는 워싱턴에서 제5차 한 · 미 차관급 전략대화를 가졌다.

또한 2013년 중 러셀(Daniel Russel)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줌왈트(James Zumwalt) 국무부 동아태수석부차관보, 메데이로스(Evan Medeiros) NSC 아 · 태 담당 선임보좌관 등 한 · 미 관계 주요 인사들이 방한하여 양국 고위 당국자 간 정책협의를 수시 개최하였다. 이처럼 2013년 한 · 미 양국은 고위급으로부터 실무급에 이르기까지의 긴밀한 교류와 협의를 통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및 범세계적 차원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성과를 이루어냈으며, 양국 관계 60년 역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60년을 열어가기 위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한편, 2013년은 정전 60주년을 맞는 해로서, 7월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기념식에 우리 정부에서는 김정훈 대통령 특사(국회 정무위원장)를 비롯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였고,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하였다. 동 기념식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전쟁에서 한국은 승리하였음을 선언

하고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한국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 · 미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였다.

2013년 한 · 미 간 정상회담, 외교장관회담 및 한 · 미 · 일 외교장관 회의

한 · 미 정상회담	
일자	계기
2013.5.7	정상방미(워싱턴)
한 · 미 외교장관회담	
일자	계기
2013.4.3	윤병세 장관 방미(워싱턴)
2013.4.12	케리 장관 방한(서울)
2013.9.27	유엔 총회(뉴욕)
한 · 미 · 일 외교장관 회의	
일자	계기
2013.7.1	ARF 등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

2 한 · 미 전략동맹의 저변 공고화

2013년 한 · 미 양국은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연방 상 · 하원 의원에서부터 여론 주도층 인사, 주정부 및 주의회 인사, 그리고 학생 등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양국관계의 저변을 더욱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외교장관, 랭글 의원 접견(2013.8.28, 서울)

우리 정부는 2011년부터 미국 의원 방한 초청사업(CMEP: Congressional Member Exchange Program)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3년에는 한국전 참전 의원이자, 대표적인 친한 의원인 랭글(Charles Rangel) 하원의원과 하원 외무위 전문위원단을 한국으로 초청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정부 및 국회와 한 · 미 관계에 관한 주요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메넨데즈(Robert Menendez) 상원 외교위원장, 코커(Bob Corker) 상원 외교위 간사, 로이스(Ed Royce) 하원 외무위원장, 엥겔(Eliot Engel) 하원 외무위 간사 등 미 의회 상 · 하원 외교 담당 위원장 및 간사들이 모두 방한하여, 양국 간 협력 관계 강화에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역임한 맥케인(John McCain) 상원의원을 비롯, 질리브란드(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 등 다수의 미 의회 인사들은 방한한 계기에 정부 고위인사와 면담을 갖고, 한 · 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우리 정부는 양국 의회 외교를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국회의원들의 방미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였다. 5월 황진하 의원 등 국회의원 5명이 방미, 한 · 미 · 일 의원회의에 참가하여 3국 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9월 안홍준 외교통일위원장이 한 · 미 동맹 60주년 기념공연 참석 차 워싱턴 DC에 방문하여 미 의원과 학계인사를 만나 양국 간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세미나 참석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방미, 의원외교를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양국 국회 간 교류 증진으로 미 의회 내 친한 네트워크가 더욱 공고화되었으며, 이를 통한 한 · 미 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 의회 상 · 하원 합동회의 연설 성사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박 대통령은 5월 방미 계기 시행한 미 의회 연설에서 한 · 미 동맹이 앞으로 나아갈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여 미국 의원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는 등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아울러, 미 의회 내 구축된 친한 네트워크를 통해 한 · 미 동맹 60주년 기념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 · 통일 공동 결의안이 미 연방 의회에서 채택되는 성과도 도출할 수 있었다.

2013년에는 부시(George W. Bush) 전 대통령, 파월(Colin Powell) 전 국무장관, 스타인버그(Jim Steinberg) 전 국무부 부장관, 아미티지(Richard Armitage) 전 국무부 부장관 등 전직 고위급 인사들과 햄리(Jon Hamre)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 하스(Richard Haass) 외교협회(CFR) 회장, 슈왑(George Schwab) 외교정책위원회(NCAFP) 회장 등 주요 학계 인사들이 대거 한국을 방문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미국 내 여론 주도층 인사들의 방한을 통해, 우리의 대외정책에 대한 미국 내 이해 및 지지를 확보하고 양국 관계의 저변 확대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였다. 특히, 9월 윤병세 외교장관은 뉴욕에서 개최된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ciety) 연례만찬 계기에 2013년 한 · 미 동맹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미래를 구축해 나가는 한 · 미 동맹(Korea-U.S. Alliance: Destined to Shape the Future)' 제하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한 · 미 동맹 중시 대외정책 방향에 대한 미국 내 여론 주도층의 이해를 제고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2013년 미국 주정부 · 주의회 인사 초청 사업을 통해 마스덴(David Marsden) 버지니아 주 상원의원, 세이퍼(David Shafer) 조지아 주 상원의장 대행, 츠츠이(Shan Tsutsui) 하와이 부주지사 등을 방한 초청, 주 차원에서도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였다. 특히, 이러한 주 정부 및 의회 인사들은 방한 이후 우리 동포사회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해결 노력을 적극 기울임으로써, 양국 관계 강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평화봉사단원 환영 리셉션(2013.10.14, 서울)

아울러, 우리 정부는 한 · 미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와 인연이 있는 미국 내 인사들과의 교류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 2013년 10월 과거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미국 평화봉사단원(Peace Corps Volunteers)에 대한 제8차 방한 초청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83명의 전직 한국 근무 평화봉사단원과 가족들이 30여년 만에 재방한하여 과거 봉사지역을 되돌아보고,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활동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확인하였다. 방한한 평화봉사단원인 핼핀(Dennis Halpin) 전 하원 외무위 전문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40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연을 잊지 않고 있는 한국에 대해 감사한다'고 하는 등 초청 행사가 얼마나 의미가 깊었는지를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인사들에게 보답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과거의 봉사와 헌신에 보은하는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였으며, 한 · 미 양국 국민 간 우의를 돈독히 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우리 정부는 한 · 미 양국 학생 및 미국 의원보좌관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양국 관계의 역사와 상호 관심사를 설명하고 홍보하는 공공외교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맞춤형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한 · 미 양국의 미래 세대가 양국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동맹 관계 발전을 위한 저변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3 동맹 재조정 및 안보태세 강화

한 · 미 양국은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범세계적 안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동맹 재조정 및 강화 사업을 보다 확대 · 심화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2012.12.12)와 제3차 핵실험 실시(2013.2.12) 등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맞서 연합 군사 대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였고, 방위비분담협상 등 동맹 현안의 원만한 해결 ·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한 · 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 · 미 양국은 2013년 상반기에 키 리졸브 연합연습과 독수리 연합연습(Foal Eagle)을 실시하였다.

동 연습 기간에 미국은 B-52 전략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 F-22 Raptor 스텔스 전투기의 참가를 이례적으로 공개하였는데, 이는 상기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억제 능력과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

5월 7일 개최된 한 · 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 · 재래식 위협에 대한 억지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전작권 전환도 그러한 맥락에서 한 · 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후, 우리 국방부는 심각해진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재검토해 나가자고 미 측에 제의하였으며, 2013년 10월 제45차 한 · 미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원칙에 공감하고, 한 · 미 공동 실무단을 구성해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상기 SCM 계기 시 양국 국방장관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도 공식 승인하였다. 동 전략은 전 · 평 시 북한의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시나리오별 동맹 대응전략으로서, 한 · 미 동맹의 대북억지 실효성과 미국의 확장억지 제공 공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13년 3월 22일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Counter Provocation Plan)을 채택,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한 · 미 양국의 공동 대응을 가능케 하여, 대북 억지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한편, 한 · 미 양국은 2013년 12월 31일 부로 제8차 한 · 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2009-2013년간 적용)이 종료됨에 따라, 제9차 협정 체결을 위해 2013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총 10차례의 고위급 협의와 수차례의 실무급 협의를 가진

결과, 2014년 1월 11일 제9차 한 · 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내용에 최종 합의하고 2014년 2월 2일 정식 서명하였다.

제9차 한 · 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되는 유효기간 5년의 협정으로서 2014년 분담금 총액은 전년 대비 5.8% 증액된 9,200억 원이며, 연도별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하였고, 연도별 인상에 상한선(4%)을 두어 예외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분담금 총액의 과도한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무엇보다도 금번 협상시 정부는 방위비 분담 제도와 관행들을 한 · 미동맹 60주년에 걸맞게 개선시키는 데에 역점을 두었고, 그 결과 방위비 분담 전반에 걸쳐 포괄적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었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우리 근로자 및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 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서명식
(2014.2.2, 서울)

방위비 분담 제도개선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선 내용
분담금 항목별 배정 – 한 · 미 간 사전 조율 강화	주한미군 측이 항목별 잠정 · 최종 배정액 수치를 통보	▶	항목별 배정액 추산 단계부터 결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한 · 미 간 공동으로 종합적인 검토와 평가
군사건설 분야 – 상시 사전 협의체제 구축	주한미군 측이 사업 집행 직전(F–1년 11월)에 건설사업 목록 제출	▶	미 측이 사업 집행 전전년도(F–2년 11월)에 건설 사업 목록 초안과 사업설명서를 제출하고, 한 · 미 간 단계적 · 실질적 협의를 통해 건설 사업 최종 계획 수립(F–1년 11월) * 한 · 미 간 건설사업 조정회의 매월 2회(연 24회) 개최
군수지원 분야 –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사업 발주 및 대금 지불 관련 우리 업체의 민원 발생	▶	○군수지원 분야 상설 협의체 신설 및 행정 절차 간소화 ○발주 및 대금 지불 추적 ·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구체 조치 시행
	'한국 계약업체'에 대한 정의 규정 부재 ⇒ "무늬만 한국 업체" 참여		'한국 계약업체'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
인건비 분야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 증진 노력 / 투명성 제고	인건비 배정액 수치만 통보	▶	분담금 배정액 협의 시 인건비 분야부터 우선 검토 및 평가
	간략한 인건비 집행 결과 통보		인건비 집행 결과 상세 보고서 제출
정보 공유 증진 – 방위비 분담금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국회 보고 강화	집행 결과 위주의 제한된 정보 공유	▶	○한 · 미 간 항목별 배정 검토 결과 국회 보고 ○신규 보고서* 및 기존 집행 결과 보고서 내용을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국회 보고 * △방위비 분담금 연례 집행 종합 보고서 △현금 미집행액 상세 현황보고서

4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운영 개선의 지속적 추진


제192차 SOFA 합동위원회 (2013.12.11, 서울)

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방위를 위해 파견되어 있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확보하여 한·미 연합 방위력 증강에 기여하는 동시에, 미군 주둔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2013년 정부는 ▲「미군 헌병 영외순찰 운영개선」 마련 및 기소 전 신병인도 최초 집행 등을 통해 SOFA 보안과 법집행 분야와 형사재판권 분야의 개선을 이루었고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개소를 통해 주한미군관련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미군관련 우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우선 정부는 2012년 7월 평택에서 미군 헌병이 영외순찰 중 우리 국민에게 수갑을 채운 사건과 관련, 동 사건이 SOFA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관련 규정의 운영상의 미비로 인한 것이라는 인식하에, 재발방지를 위한 SOFA 제도개선 노력을 적극 전개하였다. 2013년 12월 11일 제192차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한·미간「미군 헌병 영외순찰 운영개선」에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미군 헌병의 영외순찰이 '미군 간의 규율과 질서의 유지'라는 SOFA상의 본래 취지 내에서 엄격히 실시되도록 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우리 수사당국의 기지 인근 순찰권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이루었다.

1967년 합의사항	2013년 개선 내용
한 · 미 합동순찰 최대한 활용 (maximum use)	– 합동 순찰 의무화 / 단, 우리 경찰과의 조정(coordination) 후 우리 경찰 인력제공 불가 시 미순찰대의 단독순찰 가능 – 미순찰대는 부사관 또는 장교가 인솔
미군 법집행 당국은 미군 구성원이 관련된 것 외에는 법집행 권한 · 책임 무(無)	– 미군 법집행 당국은 미군 이외의 어떠한 人에 대하여도 법집행 권한 · 책임 무(無)
(규정 무(無))	– 미순찰대는 우리 경찰과의 조정(coordination)하에 ▲자기방어를 위해 비살상 무기 휴대가능 ▲긴급 상황에 한해 미순찰대의 안전을 위해 총기 휴대가능

또한, 2013년 3월 발생한 이태원 미군 차량도주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미군 피의자에 대한 기소 전 신병인도를 최초로 시행하여, 2012년 5월 한 · 미 간 합의한 「SOFA 형사재판권 운영개선」(▲기소 전 신병 인도 시 '24시간 이내 기소 의무' 조항 삭제 ▲미 정부대표 출석 시까지 미 측 피의자 구금 가능 조항 추가 등)의 기소 전 신병인도 절차 합의사항이 실제 작동되도록 하였다.

정부는 또한 적극적 SOFA 운영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2013년 4월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를 개소하였다. 상담센터는 ▲주한미군의 공무 중 또는 비공무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교통사고, 군용기 추락사고 등)의 민 · 형사상 처리절차 등 법적 제도와 SOFA 전반에 대한 안내 등 맞춤형 대국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미군기지 인근 지자체 · 일선 경찰서 등을 방문하여 현장민원을 청취하고, 처리절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차를 안내하는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SOFA 운영 및 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아울러, 최근 연 1회 개최해 온 SOFA 합동위원회 회의를 연 2회로 확대 · 정례화하고 SOFA 특별합동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SOFA 현안 대응을 위해 SOFA 체제하에서 가능한 모든 협의채널을 활발히 가동키로 미 측과 합의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SOFA의 성실한 이행과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공고히 해 나가는 한편, 한 · 미 간 신뢰 및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SOFA 합동위원회, 특별합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에서의 건설적인 협의를 통해 SOFA 운영에 있어 개선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운영 발전을 기해 나가는 적극적 · 선제적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제 4 절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 심화

1 한 · 일 관계

일본은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자, 동북아 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정부는 2013년 신정부 출범 이후, 올바른 역사인식을 기초로 한 · 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기조 하에 일본과의 관계발전을 도모해 왔다.

이러한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2012년 12월 일본의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역사퇴행적 언행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4월 일본 정부인사와 정치인들이 2차 대전의 전범을 합사하고 일본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의 춘계예대제(봄 제사)에 대거 참배하였다.

또한, 일본은 정부 내 영토 · 주권대책기획조정실 설치 발표(2월), 고등학교 교

과서(3월), 외교청서(4월), 방위백서(7월) 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 기술, 일본 내각부 독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8월) 등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탈 과정의 첫 희생물이었던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도발을 계속하면서 안정적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우리의 대일외교 추진에도 큰 장애를 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일 측이 과거사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가운데,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구 등 군사력의 강화와 활동범위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의구심과 우려도 확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ARF 외교장관회의(7월) 및 UN 총회(9월) 계기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두 차례 개최하고, 양국 외교차관 상호 방문(7월) 등 양국 외교당국 간 협의를 지속하면서 역사인식 문제 및 과거사 현안 해결을 위한 양국 간 접점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였다.

그러나, 2013년 12월 아베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함에 따라,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반하여 양국관계가 발전하여 나가기를 기대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일본의 국가 지도자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여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것은 일본이 패전 후 국제사회에 복귀한 전제와 전후 국제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주변국들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UN 총회 계기 한 · 일 외교장관회담(2013.9.26, 뉴욕)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 및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

중히 대처하는 한편, 국내외 독도 관련 고지도, 고사료 등을 조사 · 수집하고, 국제법적 논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독도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동영상을 제작하고 독도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등 일 측 주장의 허구성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한 · 일 간 과거사 문제의 상징적 현안이 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한 · 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으며, 아시아여성기금 등을 통해 성의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 일 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 · 일 양국 간 재정적 · 민사적 채권 ·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 · 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아시아여성기금의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인정에 기초한 배상이 아니며 피해자들을 인도적 자선사업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 피해자 자신들이 거부한바 있다. 또한, 당시 우리 피해자들이 공식사죄 등 명예회복 조치가 없는 위로금 지급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하였음에도 아시아여성기금은 일시금 지급을 강행하여 피해자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그 사업을 종료하였던 만큼, 일본 측의 조치는 불충분한 것이었다.

국제사회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조치를 촉구해 오고 있다. 쿠마라스와미(Coomaraswamy)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및 맥두걸(McDougall) 유엔인권소위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유엔 산하 시민적 · 정치적 권리 위원회, 여성차별철폐 위원회,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위원회, 고

문방지 위원회 등 다수의 인권 메커니즘들은 대부분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일본정부의 책임 인정, ▲정부 차원의 책임있는 조치, ▲올바른 역사교육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EU 등 다수 국가의 의회에서 결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해 온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 정부는 2013년 UN 총회 및 인권이사회 등 국제무대에서의 문제 제기를 통해 일 측의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위안부 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특히, 2013년 9월 UN 총회에 참석한 윤병세 외교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전시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지금도 생존해 있는 지난 세기의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이 납득할만한 책임 있는 조치와 명예회복을 통해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속히 치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이외 과거사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2013년에도 지속하였다.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사업, 원폭피해자 지원 사업을 계속하는 한편, 유골봉환사업에 있어서는 사할린 지역으로 그 범위를 넓혀, 러시아 외교부와의 2차례에 걸친 실무협의(2012.5월, 2013.5월)를 통해 2013년 8월 29일 사할린 한인 유골을 최초로 국내 봉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역사퇴행적 언행과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우리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소중한 이웃이라는 관점에서, 한 · 일 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문화 · 인적 교류 및 공공외교 사업도 적극 실시하였다. 2012년 재개된 「한 · 일 젊은 외교관 교류사

업」을 2013년도에도 실시하였고, 한 · 일 간 대표적 문화축제인 「한 · 일 축제한마당」 행사도 9월 15일 및 9월 21-22일간 서울과 도쿄에서 각각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아울러 민간차원의 양 국민 간 우호 친선 활동들에 대한 지원도 계속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1년 도쿄 오쿠보 역에서 일본인을 구하고 숨진 고 이수현 학생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발족한 이수현 현창 장학회의 제12회 장학금 수여식(10.17)에 메시지를 보내어 양 국민 간 우호친선 증진을 기원하였고, 매년 고대 한일 양 국민의 우호와 교류의 역사를 재현하고 있는 오사카 시의 제22회 '사천왕사 왔소' 행사에도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2013년 양국 간 교역은 947억 불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일본은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대상국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인적교류 측면에 있어서는, 2013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전년대비 약 20퍼센트 증가한 약 245만 명을 기록한 반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은 전년 대비 약 21퍼센트 감소한 약 274만 명을 기록하였다.

UN 총회 계기 한 · 일 외교장관회담(2013.9.26, 뉴욕)

한 · 일 외교장관회담

일 시	주요 내용
2013.7.1	ARF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 · 일 외교장관회담(브루나이)
2013.9.26	UN 총회 계기 한 · 일 외교장관회담(뉴욕)

한 · 일 고위급인사 주요 교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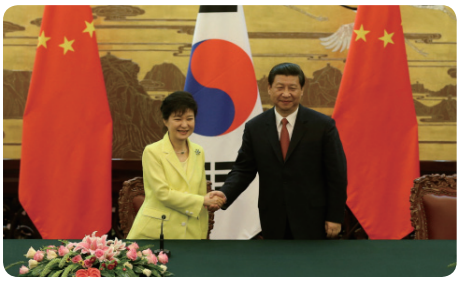
일 시	주요 내용
2013.1.4	누카가 후쿠시로 일 · 한의련 간사장 등 일본 아베총리 특사단 방한
2013.1.10	제12차 한 · 일 차관전략대화(동경)
2013.2.23–26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 차 모리 요시로 일본 전총리, 후쿠다 야스오 일본 전총리, 누카가 후쿠시로 일 · 한의련 회장 일행 방한
2013.2.24–25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 차 아소 타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대신 방한
2013.3.6	박근혜 대통령, 아베 총리 간 전화 통화
2013.7.11–12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사무차관 방한
2013.7.17–19	김규현 제1차관, 주일본대사관 신청사 개관식 참석 차 방일
2013.8.21–24	마에하라 세이지 의원 등 일본 민주당 「전략적 일한관계 의련」 방한
2013.11.14–16	제19회 한일/일한 협력위원회 합동총회 참석 차 이승윤 회장대행 등 한일협력위원회 대표단 방일
2013.11.29–30	제36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참석 차 황우여 회장 등 한일의련 소속 국회의원(약 40명) 방일

2 한 · 중 관계

2013년은 한 · 중 양국에게 있어 지난 20여 년간의 양국관계 발전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20년의 '새로운 한 · 중 관계'를 열어 나가는 전환점을 마련한 한 해였다.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 방중 시, 한 · 중 정상은 향후 양국 관계 발전의 청사진을 담은 '한 · 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이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제반 분야에서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이행방안으로서 정치 ·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 강화, 경제 ·

사회 분야 협력 확대 및 양 국민 간 다양한 형태의 교류 촉진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서, 전략적 소통 강화 차원에서는 양국 지도자 간 긴밀한 소통 증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 ▲한 · 중 외교안보대화 ▲한 · 중 정당 간 정책대화 ▲한 · 중 국책연구소 간 합동전략대화 등 4개의 전략대화 채널 신설, 외교차관 전략대화의 연 2회 정례화 등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경제 · 사회 분야 협력 확대 차원에서는 한 · 중 FTA 협상 진전 및 새로운 성장동력 조성을 위한 교류 · 협력 증진 등에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양 국민 간 교류 촉진 차원에서 양국관계의 장기적 ·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양 국민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가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학술 · 지방 간 교류 · 전통예능 등 다양한 인문분야에서의 교류 및 공공외교 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박 대통령 국빈방중 계기 한 · 중 정상회담
(2013.6.27, 베이징)

이러한 구상과 계획 하에 2013년 중 정치 · 안보 분야에서는 우선 양국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 간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월 국빈 방중 계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번째 한 · 중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 계기에 시 주석과 환담하고, 10월 발리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2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또한, 윤병세 외교장관은 4월 중국 방문 및 ASEAN+3/ARF 외교장관회의(6월)와 UN 총회(9월) 참석 등 계기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3차례의 외교장관 회

담을 가졌다. 아울러, 양국 외교차관 간에는 전략대화(6월, 베이징)도 개최되었다. 양국 의회 차원에서도 강창희 국회의장의 방중(12월)과 푸잉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주임의 방한(11월) 등이 이루어졌다.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해 신설키로 합의한 4개 전략대화 채널 중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체제(11월, 서울), 한 · 중 외교안보대화(12월, 베이징), 한 · 중 국책연구소 간 합동전략대화(12월, 서울) 등 3개 채널도 공식 출범하였다.

한편,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우리 측은 한 · 중 정상회담(6월, 10월) 및 외교장관 회담(4월, 6월, 9월), 외교차관 전략대화(6월) 등 각종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핵불용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를 더욱 확고히 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중국 측은 우리 측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경제 · 통상 분야에서는 2013년 양국 간 교역액이 2,289억 불을 기록함으로써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제1위 교역 · 수출 · 수입대상국 지위를 유지하였고, 우리는 중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 지위를 유지하였다. 아울러, 한 · 중 FTA 제1단계 협상이 타결(9월)되고 2단계 협상이 개시(11월)됨으로써, 한 · 중 FTA 체결을 위한 양측 간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인적교류 분야에서는 수교 당시 13만 명에 불과했던 한 · 중 간 인적 교류 규모가 2013년에는 829.6만 명에 달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양국을 오가는 항공편 수도 매주 741편에 이르렀다. 특히, 양국 정부는 양 국민 간 심적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양국 외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 · 중 인문교류공동위원회'를 공식 발족(11월, 서울)시키고 동 공동위를 매년 개최하기로 하

였다. 아울러, 양국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 제고 차원에서, '한 · 중 공공외교 포럼'도 개최(9월, 서울)하였다. 또한, 중국 지방 고위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유력인사 방한 초청사업(2회) 및 중견급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미래지향 방한 초청사업(5회), 한 · 중 기자단 교류사업(6월, 11월), 중국인 파워블로거 초청사업(7월) 등 다양한 교류 협력 활동을 추진하였다.

한편, 양국 정부는 양국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갈등 요인들에 대한 관리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양국 정부는 한 · 중 간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서해상의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해 2013년부터 한 · 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키로 하고, 7월과 12월 옌타이와 목포에서 이를 각각 개최하였으며, 중국 어업정책 담당 공무원 방한 초청사업(11월) 등도 실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국빈 방중 계기 한 · 중 정상회담(2013.6.27, 베이징)

한 · 중 정상회담

일 시	주요 내용
2013.6.27	박근혜 대통령 국빈 방중 계기 박근혜 대통령–시진핑 주석 회담(베이징)
2013.10.7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박근혜 대통령–시진핑 주석 회담(발리)

한 · 중 외교 장 · 차관회담

일 시	주요 내용
2013.4.24	윤병세 외교장관 방중 계기 한 · 중 외교장관회담(베이징)
2013.6.3	제6차 한 · 중 외교차관(제1차관–장예쑤이 상무부부장) 전략대화(베이징)
2013.6.30	ASEAN+3/ARF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 · 중 외교장관회담(반다르세리베가완)
2013.9.27	UN 총회 계기 한 · 중 외교장관회담(뉴욕)

한 · 중 고위급인사 주요 교류 현황

일 시	주요 내용
2013.1.9–11	중국정부 특사단(단장: 장즈쥔 외교부 상무부부장) 방한
2013.1.21–24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특사단(단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방중
2013.2.23–26	류옌둥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국무위원 방한(대통령 취임식 특사)
2013.5.14–15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방중
2013.5.20–24	국회 초당파 의원대표단(단장: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의원) 방중
2013.5.22–24	양승태 대법원장 방중
2013.6.3–7	한 · 중 여성지도자포럼 중국 측 대표단(단장: 리하이펑 전국정협 부주석) 방한
2013.7.18–23	한 · 중 의원외교협의회 청년의원 대표단(단장: 정몽준 의원) 방중
2013.8.15–20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방중
2013.8.16–21	한 · 중 의회정기교류체제 대표단(단장: 이병석 국회부의장) 방중
2013.10.23–25	쩡웨이 선양시 당서기 방한
2013.11.6–8	한 · 일 · 중 고위급회의 계기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방한
2013.11.17–19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방한
2013.12.4–7	강창희 국회의장 방중
2013.12.22–23	장지엔민 칭하이성 부성장 방한

3 한 · 일 · 중 3국 협력



제8차 한 · 일 · 중 고위급회의(2013.11.7, 서울)

2013년은 한 · 일 · 중 3국 간 최초의 3국 협력에 관한 공동문서인 '3국 협력 증진에 관한 공동 선언'을 채택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무역 · 투자, 환경, 과학기술, 국제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3국 간 협력이 심화 · 발전되었다. 현재는 18개의 각 분야별 장관급 회의를 포함 총 58개의 정부 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3국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중 · 일 관계 등 동북아 정세의 영향으로 회의 개최가 무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는 11월 7일 서울에서 제8차 한 · 일 · 중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3국 간 부국장급 회의(3회)와 과장급 회의(4회) 등 실무급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3국 협력의 추진 동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 일 · 중 3국 간의 인적 · 물적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 · 발전하고 있다. 2013년 3국 간 인적 교류는 약 1,740만 명으로 1999년 658만 명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3년 한 · 일 · 중 3국 간 교역액은 약 6,300억 불로 1999년 약 1,200억 불에 비해 약 5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3국 협력의 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한 · 일 · 중 3국은 2013년 11월

한중일 FTA 제3차 협상을 완료하는 등 FT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고 있다.

또한, 앞으로 3국 협력의 미래를 주도해 나갈 3국 청년들 간 교류 증진을 위해 2013년 우리나라는 3국 대학생 동아리 초청행사(3.19, 7.5), 한중일 3국 대학생 동아리 외교캠프(8.9-11) 등을 개최하였다.

2011년 설립된 3국 협력 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은 출범 3년째를 맞아 3국 협력이 제도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오고 있다. 2013년 9월 1일 시게오 이와타니 사무총장을 비롯한 제2대 사무총장단이 취임하였으며, 이와타니 사무총장은 한 · 일 · 중 3국의 지지 하에 2013년 10월 10일 ASEAN+3 정상회의에 최초로 참석함으로써, 3국 협력 사무국의 위상을 높이고 한 · 일 · 중 3국과 ASEAN 간 협력 강화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3국 협력 사무국은 한중일 다도문화 행사(5.16), 비디오 콘테스트 대회(6.8-7.5)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주최함으로써 3국 간 문화 교류 증진에도 기여하였으며, 3국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YAP: Young Ambassador Summer Internship Program, 7.8-8.18)을 통해 3국 청년 간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제8차 한 · 일 · 중 고위급회의 (2013.11.7, 서울)

한 · 일 · 중 고위급회의

일 시	주요 내용
2013.11.7	제8차 한 · 일 · 중 고위급회의 개최를 통하여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외무심의관-류전민 외교부 부부장 간 의견 교환(서울)

4 한 · 러 관계

2013년 한 · 러 양국은 양국 신정부 수립 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관계의 발전 잠재력을 실현해나갔다.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정신 하에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는 등 신정부 간 협력 방향을 정립하고 정치 · 안보, 경제 · 통상, 문화 ·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1년 차인 2013년 주요 4개국인 러시아와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러시아에서 개최하는 제4차 고위급 국제 안보회의에 우리 외교안보수석이 참석하는 등 정상외교 및 고위급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였다. 이를 통해 정상 간 교류 정례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 간 전략적 소통 및 정치적 신뢰 관계를 강화하였다.



한 · 러 정상회담(2013.9.6, 상트페테르부르크)

한 · 러 정상은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계기에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 및 신정부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 러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킬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기존의 양국 간 실질협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러시아 극동 · 시베리아 진출 활성화 방안, 북극항로 활성화 및 항만 개발협력, 청소년 교류 등 호혜적인 협력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 · 추진해 나가자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동

계기를 적극 활용, 우리 측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러시아 측의 지지와 참여를 당부하였다.

2013년 11월 푸틴 대통령은 주변 주요 4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 2013년 두 번째 한 · 러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나진 · 하산 물류협력사업 등 양국 간 주요 실질협력 사업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양국 간 인적 · 문화 교류 증진 방안,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 포괄적인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동 정상회담 계기 '새로운 한 · 러 관계, 그리고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분야별 구체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양측은 러시아 측의 북핵불용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비핵화 관련 국제 의무 및 공약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러시아 측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공감과 한반도 신뢰 구축 노력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11월 정상회담 계기 한 · 러 일반여권 소지자 사증면제협정 및 문화원설립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민간 교류 및 이해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 · 러 정상회담(2013.11.13, 서울)

이외에도 ARF 계기 한 · 러 외교장관회담, 차관급 정책협의회, 지역국장협의회,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자원협력위원회 등 각급 고위 협의체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 간 협의 채널이 원활히 운영되어 양국의 실질협력증진 방안이 지속 논의되었다.

2013년 한 · 러 간 고위급 인사 교류

한 · 러 정상회담

일 시	주요 내용
2013.9.6	G20 정상회의 계기 한 · 러 정상회담
2013.11.13	푸틴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한 · 러 정상회담

주요 외교 사항

일 시	주요 내용
2013.1.27–30	강창희 국회의장 러시아 방문(블라디보스토크)
2013.2.25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 이샤예프 극동개발부 장관 등
2013.2.26	제22차 한 · 러 지역국장협의회(서울)
2013.6.20–22	제17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2013.7.1	한 · 러 외교장관회담(브루나이, ARF 계기)
2013.7.2–4	제4차 고위급안보회의(블라디보스토크)
2013.7.3–4	한 · 러 경제협력포럼(블라디보스토크, 매경 주최)
2013.7.3–10	한 · 러 외교협의회 대표단 방러
2013.7.9	제13차 한 · 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서울)
2013.9.5–6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 (동 계기 정상회담)
2013.10.1	한 · 러 차관급 정책협의회(러시아)
2013.11.13	푸틴 대통령 공식 방한(한 · 러 정상회담)
2013.11.12–13	제3차 한 · 러 대화 (폐막식 양국 정상 임석)

2013년에는 양국 간 경제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13년 한 · 러시아 교역액(226.3억 불)은 전년(224.5억 불) 대비 약 2% 증가하였으며 최대치를 기록하

였다. 또한, 2009년 이후 수출과 수입액 모두 연속적으로 증가하며 교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한 · 러 교역현황

(단위 : 억 불, %)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수 출	51.8	80.9	97.5	41.9	77.6	103.0	111.0	111.4
수 입	45.7	69.8	83.4	57.9	98.9	108.5	113.5	114.9
총교역	97.5	150.7	180.9	99.8	176.5	211.5	224.5	226.3
무역수지	△6.1	△11.1	△14.1	△16	△21.3	△5.5	△2.5	△3.5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 · 러 양국 간에는 종래 철도(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가스관, 전력망 연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 · 북 · 러 3각 협력사업 구상에 대해 논의해 왔는데, 2013년에는 동 구상의 구체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2013년 11월 정상회담 계기에 POSCO, 현대상선, KORAIL 등 우리 기업 3사와 러시아 철도공사 간에 우리 기업의 나진 · 하산 물류협력사업 참여를 위한 MOU가 체결되었다.

나진항 개발, 나진 · 하산 간 철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나진 · 하산 물류협력사업은 러시아 철도공사가 북측과 합작형태로 진행해 온 사업으로, 우리 기업 3사는 상기 MOU를 통해 동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한 · 러 양국정상은 11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장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는 나진 · 하산 물류협력사업의 성과 등을 보아가면서, ▲상업적 타당성 ▲남북관계 진전 등을 고려하여 여타 남 · 북 · 러 3각 협력 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3년 8월 국무총리실 산하 남 · 북 · 러 3각 협력 사업 범정부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부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극동시베리아는 한 · 러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핵심 지역으로,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러시아 극동지역 최대 교역국으로서 에너지 · 자원, 농업, 수산업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진출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연해주 고압차단기 공장 건설, 계룡건설 하바롭스크 주택건설사업, 아그로상생을 위시한 영농기업 등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의 유라시아 협력 강화 정책과 러시아의 극동 · 시베리아 중시 정책의 접목을 통해 양국 협력을 심화 발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2013년 (9-10월) 첫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시작으로 북극항로 개발과 조선분야 협력은 양국의 호혜적인 미래 협력 사업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2013년 11월 양 정상은 약 30억 불 규모의 금융 지원 체제인 '한 · 러 공동 투 · 융자 플랫폼'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극동시베리아 지역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 러 일반여권 소지자를 위한 사증면제협정' 및 '문화원 설립 협정'이 체결되고, 2014-2015년이 '한 · 러 상호방문의 해'로 지정되는 등 양국 간에는 민간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 사증면제 협정은 2014년 1월부터 발효되어 양 국민은 60일간 비자 없이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2013년 11월 13일 한 · 러 양국 대통령 참석하에 제3차 '한 · 러 대화' 포럼이 개최되었다. '한 · 러 대화'는 양국 간 민 · 관 · 산 · 학이 참가하는 대표적 대화 채널로, 2010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양국 정상 참석하에 지속 개최 중이다. 러시아 내 친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상설조직인 '러한 소사이어티'가 출범되는 등, 한 · 러 관계 발전을 위한 저변을 확대하고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현지 밀착형 공공외교 강화 노력이 가시화되었다. 이러한 공공외교 강화 노력들은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 및 호감도를 증진시킴으로써 경제, 정치, 안보 분야에서 한 · 러 양국 간 협력이 가시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1) 개념, 참여대상 및 협력의제

o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아시아 패러독스'로 대변되는 동북아 지역의 갈등구조를 극복하고, 다자협력의 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한 다자대화 프로세스(process)

o 참여대상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몽골 등 역내 모든 이해당사국이며, 동 구상에 관심이 있는 역외국과 협력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UN, OSCE, EU, ASEAN 등 다자 및 지역협력기구의 옵저버 참여도 가능

o 협력의제와 관련, 역내국 공동의 위협요인이 되는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환경 · 기후변화, 재난구호, 사이버스페이스 등 비전통 연성안보의제 논의로 동 구상을 시작하고 있으며, 향후 협력 과정에서 참여국들의 공감대 형성 시 전통안보로 협력의제를 확장

2) 추진 현황

o 우리 정부는 동 구상 추진을 위하여 첫째,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둘째, 의제별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실제로 협력의 관행을 축적 노력 지속

– 양자 · 다자 정상 및 고위급 외교를 통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소개 및 공감대 확산

국 가	내 용
미 국	o 대통령, 한 · 미 정상회담(5.7) 및 미 의회 합동회의 연설(5.8) 등 계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소개 o 외교부 장관, Kerry 미 국무장관 면담('13.4.3) 등 계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소개
중 국	o 대통령, 한 · 중 정상회담 및 칭화대 연설(6.27) 등 계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소개 o 외교부 장관,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 면담('13.11.18) 등 계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소개
러시아	o 대통령, 한 · 러시아 정상회담(9.6, 11.13) 등 계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소개 o 외교부 장관, 브누코프 주한러시아대사 면담('13.2.8) 등 계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소개
일 본	o 대통령, 아소 일본 부총리 접견(2.26) 등 계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소개 o 외교부 장관, 기시다 일 외무대신 면담('13.7.18) 등 계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소개
국제 사회	o 대통령, Rasmussen NATO 사무총장 면담(4.12), 한 · 베트남 정상회담(9.9), 한 · EU 정상회담(11.8) 등 계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소개 o 외교부 장관, Zannier OSCE 사무총장 면담(4.29, 7.1, 11.13), 한 · 헝가리 외교장관 회담(10.18) 등 계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소개

– 의제별 협력사업 추진 : IAEA 핵안보 국제회의(7.1), 세계 에너지 총회(10.15), 세계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 계기 사이버스페이스 분야 동북아 국가 간 회동(11.17), 제18차 동북아 환경협력 계획(NEASPEC, 11.5-6) 및 제6차 한 · 중 · 일 원자력 안전 고위급 회담(11.28) 등 계기 협력사업 추진관련 협의

3) 향후 추진 계획

o 양자 · 다자 정상외교와 고위급 외교를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한편, ▲의제별 협력사업 본격 추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세미나 ▲동북아 평화협력포럼/회의 등 주요행사 개최를 통해 동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

– 2014년에는 동 구상과 관련하여 NATO 및 EU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10월에는 제1회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회의 개최 예정

– 의제별 구체협력 사업의 경우,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환경 · 기후변화 ▲재난 관리 ▲사이버스페이스 등 중점 영역 분야에서 의제별 협력 사업 본격 추진 예정